“베개·전기매트 등 일상용품도 라돈 검출”

환경보건시민센터 “제조사·제품명 공개 소비자 구매 막아야”

“원안위 측정 방식 부적절”…엄격한 측정 기준 마련도 촉구

국산 베개와 전기 매트, 라텍스 매트리스 등에서도 라돈이 검출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6일 국산 라텍스 매트리스와 전기 매트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되고 있다며 정부에 라돈 검출 제품 제조사와 제품명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생활 속에서 라돈이 나오는 제품을 모아 측정 시연을 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시민센터는 시연에 사용된 국산 베개와 전기매트 등에서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성진 사무국장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라돈검출 논란을 빚은 생리대와 속옷 라이너 등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라돈 측정 방식은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기만하는 행위”라면서 “방사능 우려 제품은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사용을 멈추고, 소비자들이 제품 구매를 못하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안위는 지난 2일 라돈 검출 논란을 빚은 ‘오늘습관’ 생리대 및 여성용 기능성 속옷라이너 ‘미카누’가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들 제품에서 50㎝ 떨어진 곳에서 두 제품의 라돈과 토론 농도를 측정한 결과, 해당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사무국장은 “해당 제품을 착용한 여성이 아이를 안고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제품과 아이의 호흡기의 거리는 50㎝ 이하일 수도 있다”면서 “원안위가 제품 착용 부분에서 50㎝ 떨어져 측정한다는 어설픈 측정기준을 마련해 안전하다고 발표함으로써 국민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우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시민센터는 “지금부터라도 생리대를 비롯해 침구 등 일상생활에서 몸에 밀착한 채로 사용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측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제품의 제조사와 제품명을 모두 공개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제철 맞은 미나리 수확 26일 광주시 남구 승촌동 미나리꽝에서 농민들이 미나리를 수확하고 있다. 올해 미나리는 4㎏들이 한 상자에 1만원에서 1만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나명주 기자mjna@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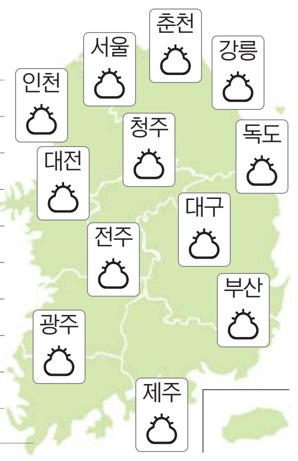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07:18	달뜸	21:27
해짐	17:21	달짐	11:02

낮기온 포근

구름 많은 가운데 일교차 크겠다.

광 주	구름많음	5/16	보 성	구름많음	2/16
목 포	구름많음	7/15	순 천	구름많음	5/18
여 수	구름많음	9/17	영 광	구름많음	1/16
나 주	구름많음	1/17	진 도	구름많음	4/16
완 도	구름많음	7/17	전 주	구름많음	3/16
구 례	구름많음	1/16	군 산	구름많음	3/15
강 진	구름많음	4/17	남 원	구름많음	0/15
해 남	구름많음	2/16	흑산도	구름많음	11/17
장 성	구름많음	1/16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남서~서	0.5	서~북서	0.5~1.5
	먼바다	남서~서	0.5~1.5	서~북서	1.0~2.0
남해서부	앞바다	남서~서	0.5	서~북서	0.5~1.0
	먼바다(동)	남서~서	0.5~1.0	서~북서	0.5~1.5
	먼바다(서)	북~북동	0.5~1.0	북~북동	1.0~1.5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9:47	04:37
	22:31	17:25
여수	05:16	11:57
	18:00	--:--

◇생활지수

뇌졸중	보통
감기	보통
미세먼지	보통

◇주간 날씨

28(수)	29(목)	30(금)	2/1(토)	2(일)	3(월)	4(화)
6/13	3/13	3/13	2/11	1/11	3/12	4/12

권익위 “지방공무원 경력채용 원서접수 불편 없애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공무원 경력채용 원서접수 방식을 ‘직접방문’으로만 제한하지말 것을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권익위가 올해 경력채용을 한 195개 기초 지자체와 17개 지방교육청의 공고문을 조사한 결과 142개(73%) 기초 지자체와 15개(88%) 지방교육청이 직접방문 접수만을 허용했다. 권익위는 공무원 경력채용 때 원서접수는 직접방문뿐만 아니라 우편, 팩스, 인터넷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고, 직접방문 제출 방식만으로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라고 권고했다.

또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는 학위증명서·경력증명서·자격증명서임에도 경력채용 공고일 이후에 발급받은 자료를 제출토록 하거나 원본서류만 제출받은 뒤 돌려주지 않는다며 이에 관한 개선도 권고했다. 유효기간이 없는 증빙자료는 발급일을 채용 공고일 이후로 과도하게 제한하지 말고, 증빙자료를 사본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원본은 탈락자가 원하면 돌려주라는 내용이다.

권익위는 앞서 행안부가 ‘블라인드 채용’을 위해 사진란 등이 없는 표준응시원서와 이력서 등 표준안을 마련했음에도 일부 기초 지자체들이 기존 서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도 권고했다. /김용희 기자 kimyh@

국민 10명중 7명 “5·18학살 책임자 처벌 미흡”

5·18기념재단 인식조사

75% “훼손·비방·왜곡 심각”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5·18 학살 책임자의 처벌이 미흡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비율로 5·18 비방·왜곡이 심각하다고 생각했다.

26일 5·18기념재단은 ‘2018 일반국민·사업참여자 5·18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나우앤퓨처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933명·사업참여자 101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학살 책임자 처벌이 잘 이뤄졌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67.7%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또 응답자 75.4%는 ‘5·18민주화운동 가치훼손·비방·왜곡의 심각성’에 대해 ‘심각하다’고 생각했다.

‘5·18 진상규명이 잘 이뤄졌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 45.9%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렇다’고 대답한 비율은 28.1%였다.

현재 5·18의 쟁점에 대해서는 기념사업추진(100점 만점 중 56.2점), 진상규명 (44.5점), 피해자 명예회복(42.3점), 피해자 배상(41.6점), 학살책임자 처벌(29점) 순으로 중요하다고 꼽았다.

전국 청소년 114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5·18에 대해 알고 있는지’ 질문에 42.5%가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반면 19.4%는 ‘모른다’고 답했다.

‘5·18과 관련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해서는 ‘국가의 부당한 폭력에 대한 정의로운 저항’이 63.7%였고, ‘대한민국 대표적인 민주주의 역사’가 32.8%로 뒤를 이었다. ‘불순 세력(북한군 등)이 주도한 폭력 사태’라는 대답도 3.5%에 달했다.

‘5·18 진상규명이 미흡하다’는 32.1%, ‘책임자 처벌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56%로 성인들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국민인식지수는 69.8점으로 지난해에 비해 3.2점 올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8%포인트에서 ±3.10%포인트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가짜 독립유공자’ 색출

보훈처 공적 전수조사

거짓 들통땐 보상금 환수

국가보훈처는 26일 “내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해 지난 100년을 되돌아보고 가짜 독립유공자를 찾아내기 위한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독립유공) 공적보다 낮게 서훈되었다고 판단되는 분들과 추가공적 발굴자의 공적 재심사를 위해 법·제도적 개선 추진도 병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위원장 지은희·이하 보훈혁신위)의 권고에 따른 조치다.

또 보훈처는 보훈혁신위 권고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은 경우 전액환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평가원 수능 이의신청 심사 모두 ‘이상 없음’ 결론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모두 ‘이상 없음’으로 결론 냈다고 26일 밝혔다. 평가원은 수능 당일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이의신청을 받았다. 이 기간 평가원 누리집에 접수된 의견은 모두 991건이었는데 문제·정답과 관련 없는 의견 개진, 취소·중복 등을 제외하고 실제 심사 대상은 107개 문항 766건이었다.

평가원은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이의심사실무위원회 심사 등을 거친 결과 107개 문항 모두 ‘문제 및 정답에 이상 없음’으로 판단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 · 전남지역 주택시장 오를것인가? 떨어질것인가?

(새로운 고강도 부동산대책 및 토지공개념 완전정복!!)

새정부의 8 · 2 부동산 대책과 계속되는 부동산 안정화 정책들...
아파트, 상가, 재개발, 재건축 등 주택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
각종규제 · 공급과잉 ·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떠오르는 토지시장의 해답은 무엇일까?
남 · 북관계 개선에 따른 경기북부지역의 전망은?
국가에서 개발하는 신개발지를 찾아라

강의내용
- 수도권 및 지방 주택, 아파트시장의 전망
- 전국 토지시장의 전망과 분석
- 평택 부동산시장의 전망과 분석
- 최고의 투자 유망지역을 찾아라
- 소액으로 건물주 되는 법 특강!
- 남 · 북관계 개선에 따른 투자비법 공개!

행복한 부동산 강의와 상담이 함께하는
[박관식 전문가의 방송 안내]
▶ WOW 한국경제TV ‘박관식의땅땅땅’ 생방송 출연중!!
(매주 일요일 저녁7시(본방) / 밤11시(재방))

무료 특강 일시 및 장소
광 주
• 일시 : 2018년 11월 28일(수) / 오후 2시~5시
• 장소 :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06호 (광주시 서구 치평동 1159-2)
(1호선 김대중컨벤션센터(마륵역)하차 5번출구 직진 200m(3분소요))

* 당일 혼잡할 수 있으니 사전접수 바랍니다
※ 무료상담 진행

박관식 대표
- 한국토지개발원
- 한국경제TV ‘박관식의 땅땅땅’ 생방송 출연중
- RTN 부동산TV ‘땅,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
- MTN 머니투데이 ‘박관식의 TV 토지이야기’ 출연
- 한국경제TV ‘부동산재테크 NOW’ 출연
- 한국경제TV ‘부동산핫라인’ 출연

최기홍 전문가
- 한국토지개발원
- 서울경제TV SEN ‘똑똑부동산’ 생방송 출연중
- GTV ‘통큰부동산’ 출연중
- GMTV 출연중
- COOKTV 출연중
- 생활체육TV 출연중
- NOLLTV 출연중

Daum 카페 “한국토지개발원 토지의 神”에 가입해서 부동산정보교류 함께해요

(KLD) 한국토지개발원
부동산세미나 문의 : 02) 595-4236, 4237
KAKAO TALK “한국토지개발원”을 검색해서 친구추가를 해주세요.